
과학기술인의 종합복지 제고 전략
: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중심으로
(How to Improve the Welfare of Science & Technology Personnel
: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Welfare Town for S&T Personnel)

정선양* · 이종민**

< 목 차 >

- | |
|----------------------------|
| I. 서론 |
| II. 기존문헌의 검토 |
| III. 과학기술인 복지의 개념 및 현황 |
| IV.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건립방안 |
| V. 결론 |

Summary : Science & Technology(S&T) personnel have been playing a major role to develop our country since S&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s S&T activities are done by S&T personnel,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welfare of S&T personnel in order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S&T activities. We should motivate them to pour their efforts and energy in S&T activities. However, the issue of S&T personnel's welfare has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not only in academic research, but also in actual S&T policies. It has caused many social problems, for example, avoidance of S&T areas by young generation, low social recognition of S&T community, and so on.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at

*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기술혁신연구소 소장(e-mail: sychung@sejong.ac.kr)

** 세종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 연구원(e-mail: 3y231291@dreamwiz.com)

investigating how to effectively improve S&T personnel's welfare. In this paper, we will suggest the 'Comprehensive Welfare Town for S&T Personnel' as an effective instrument for improving of S&T personnel's welfare. In particular, we will discuss the detailed aspects of the comprehensive welfare town : objectives, strategies and budgets.

Keywords : Science & Technology(S&T) Personnel, Comprehensive Welfare Town, Welfare Improvement, S&T Competitiveness

I.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를 맞이하여 한 국가의 과학기술 및 지식수준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떤 국가가 기술적 측면에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보유했다는 것은 경쟁국가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선점자 이익(first-mover advantage)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Khalil, 2000; Tidd, 2005).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이룩하는 것은 치열한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세계적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목표를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과 핵심기술의 보유가 21세기 국가의 존폐를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글로벌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의 과학기술 선진국의 경우 그동안의 하드웨어적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문화 창달,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과학문화의 대중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과학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정선양, 1999a, 2001).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공공연구기관의 설치 및 확대, 과학기술개발 예산증대, 인력양성 등 하드웨어 측면의 강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상당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왔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지각하고 과학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R&D 혁신 프로그램, 연구개

발 지원 사업,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 개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 육성 정책방안을 실행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하드웨어 측면에의 편중으로 과학기술 문화, 복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과 과학기술 대중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정선양, 1999a). 그 결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는 직무 불만족, 고용에 대한 위기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 매우 심각한 문제점들에 봉착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으로의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 복지적인 측면으로의 접근은 거의 전무하였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몇몇 수행되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없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소프트웨어적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분야인 과학기술복지(S&T welfare)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복지의 중요 분야로서 과학기술인 복지(S&T personnel's welfare)의 향상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의 종합적인 실천적 대안으로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건립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II. 기존문헌의 검토

과학기술인의 복지에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연구이외에 실천적인 대안이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연구가 별로 없어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여 정책적인 제언

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인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집합적인 복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 개선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저하 그리고 과학기술인들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불만족 등은 현재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연구개발예산확대,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방안(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제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 ‘닦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선정, 산업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포상), 출연(연) 활성화 및 연구원 사기진작,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과학기술 창조역의 전당 건립 등), 실직 및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대책, 과학기술인 정책결정 참여의 활성화 및 이해증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왔다(과학기술부, 2002).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으며,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노후복지에 대한 사안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술한 과학기술 복지사업들은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인의 복지향상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로는 먼저 과학기술인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령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즉 과학기술인력은 초중고 학생으로부터 대학생, 신진 과학기술인, 중견 과학기술인을 거쳐 은퇴 과학기술인에 이르는 전 주기적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의 전 주기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이들 간의 연계 및 융합화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특성을 감안한 과학기술인의 복지향상의 노력은 종합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인 복지는 연구개발, 교육훈련, 여가 및 스포츠,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각 분야들은 서로 분리되어 추진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집적화 되어 분야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동안 과학기술복지관련 기존문헌을 검토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과학기술인 복지 관련 문헌고찰 요약

저 자	연구 내용	연구의 결론 / 대안제시
박대식 (1999)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상관성 분석	출연(연)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팀워크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고 있으나, 승진과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정선양 (2001)	국가혁신체제를 지식체제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국가의 지식능력향상의 필요성 제시	과학기술의 soft infra의 구축을 강조하여 국가혁신체제 전체를 관통하는 유연한 soft infra로서 국가표준 등을 제시
이수연 (2002)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욕구와 실태에 관한 분석, 후생복지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인들의 낮은 직무 만족도와 경제적 보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산-학-연간 복지 불평등 해소,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요직에 과학기술인력의 채용 확대 방안제시
이순형 등 (2002)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석학들을 활용한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방안 제시	해외 석학 강연회, 석학과 대중의 만남, 석학과 꿈나무와의 만남, 과학문화 최고 경영자 과정 등 과학기술문화 진흥 방안을 제시
과학기술부 (2002)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비전제시를 위한 추진내용 제시	정부연구개발예산확대,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방안, 출연(연) 활성화 및 연구원 사기진작,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 실직 및 퇴직 과학기술인 지원 대책, 과학기술인 정책결정 참여의 활성화 및 이해증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계획
대덕전문 연구단지 관리본부 (2002)	'과학기술인 추모공원 및 종합 휴양촌 건립'에 대한 계획 수립과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레저타운과 추모공원에 대한 기본구상과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관리방안 제시
김선영 등 (2003)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의 현실과 원인 분석, 이공계 기피현상의 현황과 추세 파악 및 대응방안의 모색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방안으로서 정책지원의 확대/강화, 과학기술계 자격증 제도 확충 및 활성화 방안, 해외연수기회 제공 및 지원강화, 산업계 고급인력 공급지원, 스타 과학자의 발굴과 소개를 제시
김학수 등 (2004)	과학기술인들과 일반사람들이 느끼는 과학기술인에 관한 인상(이미지) 연구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공헌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지만, 경제적 대우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경제적 보상의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이수연 (2004)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출연(연) 복리후생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 출연(연) 복리후생제도의 전 주기적 대안 모색	연구기관의 자율성 강화, 가족 친화적 복지제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복리후생제도 등 10가지 정책적인 제안 제시

저자	연구내용	연구의 결론 / 대안제시
임병우 (2004)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영국의 노인 복지정책 분석	주거, 고용, 건강, 교육, 소득의 5가지 차원에서 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김근홍 (2005)	개혁 프로그램 패키지인 독일 '아젠다 2010'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함	신 자유주의적 이념이 노인관련 사회정책들의 변화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노인복지 정책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입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Majer (1992)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 필요성 강조함	과학기술정책이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의 향상을 넘어서 사회적 친화성, 환경적 친화성, 국제적 친화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함
Badham (1994)	과학기술정책이 사회경제적인 목표의 축에서 사회적 목표추구로 변환할 것을 주장함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 친화적 기술이전 및 확산,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함
Shienstock (1994)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을 강조함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을 물질적 기술에서 실생활에 연계된 기술의 개발을 지향하고 성장 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의 기조로 변환을 강조함
Welsh & Schneider (1995)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의 개발의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창조에 공헌할 것을 강조함	과학기술발전이 사회발전, 환경 친화적 발전, 고용의 지속성 등에 공헌하여 사회의 soft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함
Croissant (2004)	동아시아 복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함	공공지출, 사회시스템, 복리후생, 교육 등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을 비교 분석을 실시. 개혁에 대한 필요성 주장함
Gomanee 등(2004)	원조(aid)가 집합적인 복지, 유아사망과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측정을 증가시키는데 공헌한다는 가정을 테스트함	원조는 직접적으로 복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장의 영향을 통해 복지를 증진시킴(원조의 효과성은 단순히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지출의 효능을 증가시킨다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그동안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있어서 복지, 문화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패러다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관행이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선진국의 정책을 모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복지와 관련하여 Croissant(2004)의 연구와 임병우(2004), 김근홍(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이 특히 노령 층에 대한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등한시해온 원로 과학자 및 은퇴과학자들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의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의 복지, 문화, 사회발전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사회복지의 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은 유럽지역에서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Majer(1992)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그동안의 양적인 성장(quantitative growth)에서 질적인 성장(qualitative growth)으로 변화 필요성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정책이 그동안의 경제적 성과의 향상을 넘어서 사회적 친화성, 환경적 친화성, 국제적 친화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Shienstock(1994)은 과학기술정책이 그동안의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을 주장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을 물질적 기술에서 실생활에 연계된 기술의 개발을 지향하고 성장지향적인 정책기조에서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의 기조로 변환을 강조하고 있다. Badham(1994)은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이 사회경제적인 목표(socio-economic purposes)의 축에서 사회적 목표(social purpose)의 추구로 변환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 친화적 기술이전 및 확산,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Welsh & Schneider(1995)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매우 폭넓게 파악하여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의 개발의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미래창조에 공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과학기술발전이 사회발전, 환경 친화적 발전, 고용의 지속성 등에 공헌하여 사회의 soft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사회발전의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의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박대식(1999)의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중견 과학기술인들의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의 상관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직무 및 팀워크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승진, 신분보장의 문제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과학기술복지정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2002)는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 복지예산의 확대,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심층적인 연구에 기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2002)는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의 방안으로 과학기술인 추모공원과 휴양촌의 건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술연구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은 적으나, 과학기술인 복지의 개념을 작고한 과학기술인의 범위까지 넓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김선영 등(2003), 이수연(2002, 2004), 김학수(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선영 등(2003)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및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문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하여 과학기술인 보상체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및 중견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증진 및 복지향상의 문제만을 논의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학수(2004)는 과학기술인들과 일반사람들이 느끼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상(이미지)에 관한연구를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은 그들의 과학기술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한 공헌도는 높은 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수연(2002)은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욕구와 실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 과학기술인력들이 낮은 직무만족도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산-학-연간 과학기술인력의 복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수연(2004)은 '과학기술인의 종합복지에 관한 전 주기적 종합복지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과학기술인력의 복지를 초중고에서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의 전 주기적인 복지제고 방안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인의 종합복지의 제고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평가되나 이와 같은 종합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종합적이

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와 복지 및 문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의 과학기술복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출연(연) 연구원 등 일부의 대상을 고려하거나, 휴양촌 등 일부의 수단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과학기술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연구는 없어왔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에 관한 연구는 매우 극소수인데, 이들 연구들은 과학기술인 종합복지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의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종합복지의 측면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그동안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설립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써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전략경영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과학기술인 복지의 개념 및 현황

1. 과학기술인 복지의 개념

복지제도는 크게 공공복지와 복리후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주체와 객체 간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공공복지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고, 복리후생은 기업이 피고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를 뜻한다. 국가가 주체인 공공복지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공복지는 사회 안정화를 실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복지의 실현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국가관을 심어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불어 가는 사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올바른 사회문화를 창달하고, 확산시키기도 한다. 복리후생은 조직적·기업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일체감을 고무시키고, 피고용인들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일조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복리후생은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정부에 의한 복리후생 및 복지 증진의 문제는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더욱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가 갖는 근본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먼저, 과학기술이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띠는 것을 그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회임기간이 길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은 단기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연구개발만을 지향하여 장기성이 요구되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를 꺼려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위험성이 높고, 연구기간이 긴 프로젝트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입의 당위성이 있다. 이와 같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회임기간이 긴 과학기술분야는 정부의 개입 및 후원이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며(Gielow 등, 1985; Stoneman, 1987; Ewers, 1990; Chung, 1996; 정선양, 1999a; 2006),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인의 복지문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상 높은 우선순위를 확보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국가경쟁력의 향상·유지·확대에 필수적인 과학기술활동이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의 복지향상의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과학기술인 복지를 향상할 것인가이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과학기술인 복지의 개념은 국가적인 차원의 공공복지와 개별기관 차원에서의 후생복지의 2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복지와 복리후생은 주체와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해당 복지의 수혜자들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복지제도(복리후생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복지에 대한 세부 분야를 선정하여 그 수혜 범위와 종류에 대한 구체화를 달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의 광범위한 범주 가운데 특정 분야만을 선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구체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주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면서도 대표성을 갖는 사회·문화, 교육 그리고 보건 분야를 고려하였다. 물론 전술한 3가지 대분류가 모든 복지의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천적인 대안의 제시조차 되어오지 못했던 과학기술인 복지 분야에 있어 우선적이며, 기본적으로 고려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하는 바이다.

먼저, 사회·문화적인 측면은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은 단지 현 과학기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과학기술인인 청소년부터 중견 과학기술인의 교육까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건강증진)적인 측면에서는 현직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 평생을 일조한 은퇴 과학기술인의 보건향상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 과학기술인들의 수혜에 중점을 두었다.

2. 과학기술인 복지의 현황

먼저 ‘과학기술인’이라는 용어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구체화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1차 수혜자가 될 대상자를 ‘이학과 공학을 전공한 학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상구분에 의한 1차 수혜자는 이학인과 공학인을 총괄한 168,699명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분포를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26.5% (52,595)명이며, 석사 34.2% (67,695명), 학사 35.3% (69,892명)으로 나타났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종합복지타운은 편협한 의미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과 편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잠재적인 과학기술인(초, 중, 고등학교 학생)과 은퇴 과학기술인 그리고 일반인 또한 본 시설의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으로 하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2003년 설립하였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인 복지계획수립과 과학기술인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 발굴을 기본 목표로 하여 전 생애 종합복지체계(life cycle welfare)와 선택적 복지체계를 구축(choiceable welfare) 하는 것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설립 이후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을 활성화 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부터는 퇴직공제(연금)사업 및 적립형 공제사업을 출범,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공제회(군인, 공무원)에 비하여 아직 체계화된 운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수익사업 발굴에 더욱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공제회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인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등의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외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대덕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등 관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2006년 말 완공 예정인 과학기술인 창조의 전당은 과학기술문화 증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학기술인의 종합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중적인 과학기술문화 형성, 노후보장대책강구(퇴직, 노후보장 등), 주요 사회요직의 채용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정책방안과 관련 시설의 증대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지금까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 주기적인 과학기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IV.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건립방안

1.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인들의 후생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

해왔다. ‘대덕연구단지 종합복지관’ 개관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창조 의 전당’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인 대우와 복지혜택의 부족 등은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먼저, 최근 이슈화되며 진행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¹⁾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은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한 7대 추진과제 중 하나의 과제로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제시하였다(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2005). 또한, 정선양 등(2005)에서도 ‘국가과학기술 중점과제’ 가운데 ‘대덕 R&D특구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있어 대덕특구내의 복지시설과 인근지역의 시설과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과학기술인과 특구 방문자들에게 종합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최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비단 본 연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학기술계에서도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인들을 위하여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직접적인 수혜자인 과학기술인들에게 향상된 복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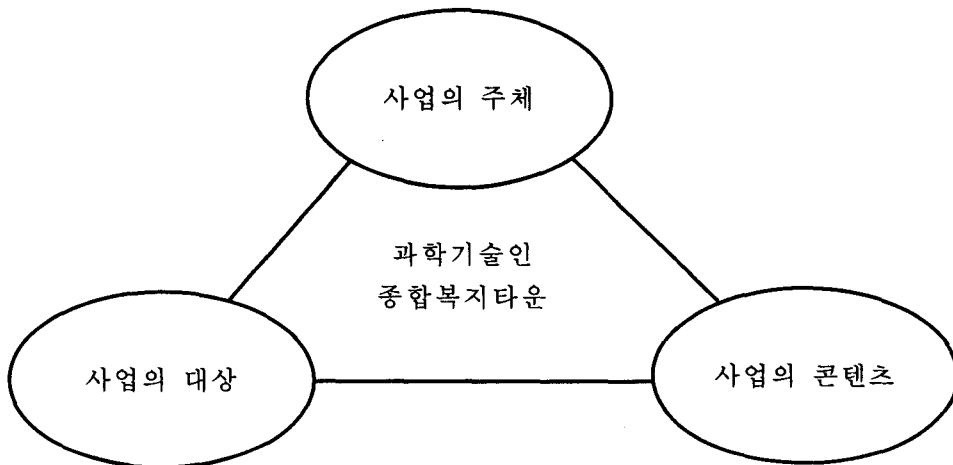
1) 대전시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계획 하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에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글로벌 환경 구축’을 위한 ‘과학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추진과제로서 다음의 7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과학영재학교 지정·육성, 2) 영·유아 보육센터 설립 및 지원, 3)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 개최, 4)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홍보 활동 강화, 5)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설, 6) 환경친화적 교통시스템 구축, 7) 과학문화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

2.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개념

2.1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종합성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사업의 대상, 주체, 콘텐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성을 필요로 한다. 먼저 종합복지타운의 대상의 측면에서 종합성을 필요로 한다(<그림 1> 참조).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 복지는 사회 전반의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즉,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까지 그 대상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각 대상 인력에 대한 개별적인 복지의 의미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차원의 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통합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복지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지만, 그 해당인력의 가족을 포함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그러므로 노인부터 어린이에 대한 복지까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종합복지타운이 단편적인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의 통합모델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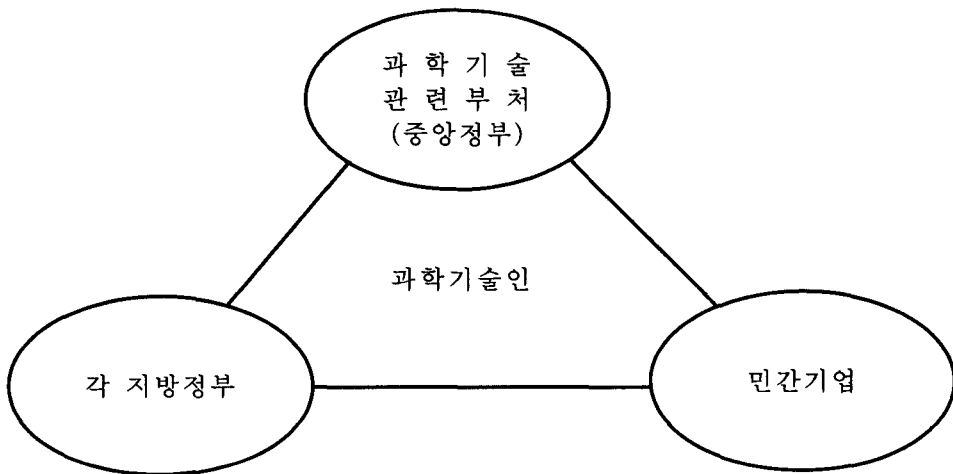
<그림 1>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종합성의 3대 차원



둘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산업의 주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통합성을 필요로 한다(<그림 2> 참조).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과학기술부처(중앙정부), 각 지방정부,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세 주체의 협조 하에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고, 대규모의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여기에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하거나 혹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적극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후원하는 방식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게다가, 본 사업은 전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차원의 과제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진행에 있어 각 주체별 수행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자생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야 하므로 설립단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심 있는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조성기’ - ‘1차 확장기’ - ‘2차 확장기’로 구분하였을 때, 사업 ‘조성기’에는 과학기술부처(중앙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도하며, 지방정부가 이를 적극 후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이 ‘1차 확장기’를 거쳐 ‘2차 확장기’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중앙정부주도-지방정부후원에서 점차 지방정부주도-중앙정부후원으로 체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 21세기 과학기술인 종합복지의 각 주체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사업의 콘텐츠에 있어서 종합성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위한 주요 핵심 분야 즉, 과학기술문화, 교육훈련, 보건의료 분야의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시설을 집적하여 이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술한 본 사업의 다양한 대상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지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2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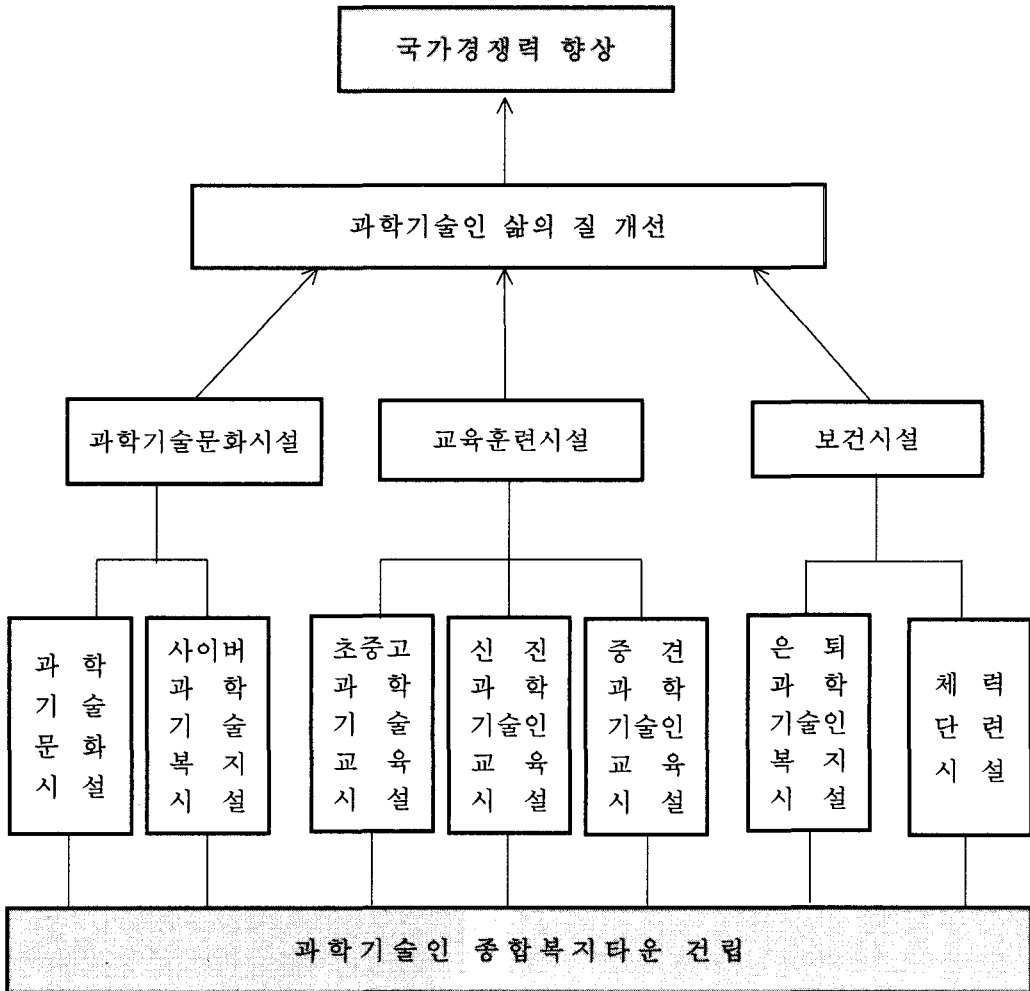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증대하여 과학기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은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는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주요 시설은 첫째, 과학기술 인력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문화시설'과 '사이버과학기술 복지시설'. 둘째, 과학기술인의 평생 교육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초·중·고 과학기술 교육시설', '신진 과학기술인 교육시설', '중견 과학기술인 교육시설'. 셋째, 과학기술인을 위한 건강증진과 윤택한 노후 보장을 위한 '은퇴 과학기술인 복지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의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그림 3> 참조). 이처럼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과학기술문화시설', '교육훈련시설', '보건시설'의 핵심 3대 시설을 갖추고, 개별 주요시설마다 실질적 실행을 위한 세부적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과학기술문화시설'은 '과학기술문화시설'과 '사이버과학기술 복지시설'로 구성된다. '과학기술문화시설'은 과학기술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며, '사이버과학기술 복지시설'은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21세기에 발맞추어 on-line상에서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시설'은 '초·중·고 과학기술 교육시설', '신진 과학기술인 교육시설' 그리고 '중견 과학기술인 교육시설'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교육훈련시설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 강화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래의 기둥인 초등학생부터 활발히 현업에서 활동 중인 중견 과학기술인 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전사적인 개념의 교육시설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시설’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초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은퇴 과학기술인에게 보건의료 분야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체력강화를 위한 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과 같은 ‘체력단련시설’을 갖추어 과학기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적인 풍요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3>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개념



3.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과학기술인 복지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전역에서 건립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인 복지시설의 선행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종합복지타운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에 근간하여야 할 것이다.

3.1 과학기술종합복지타운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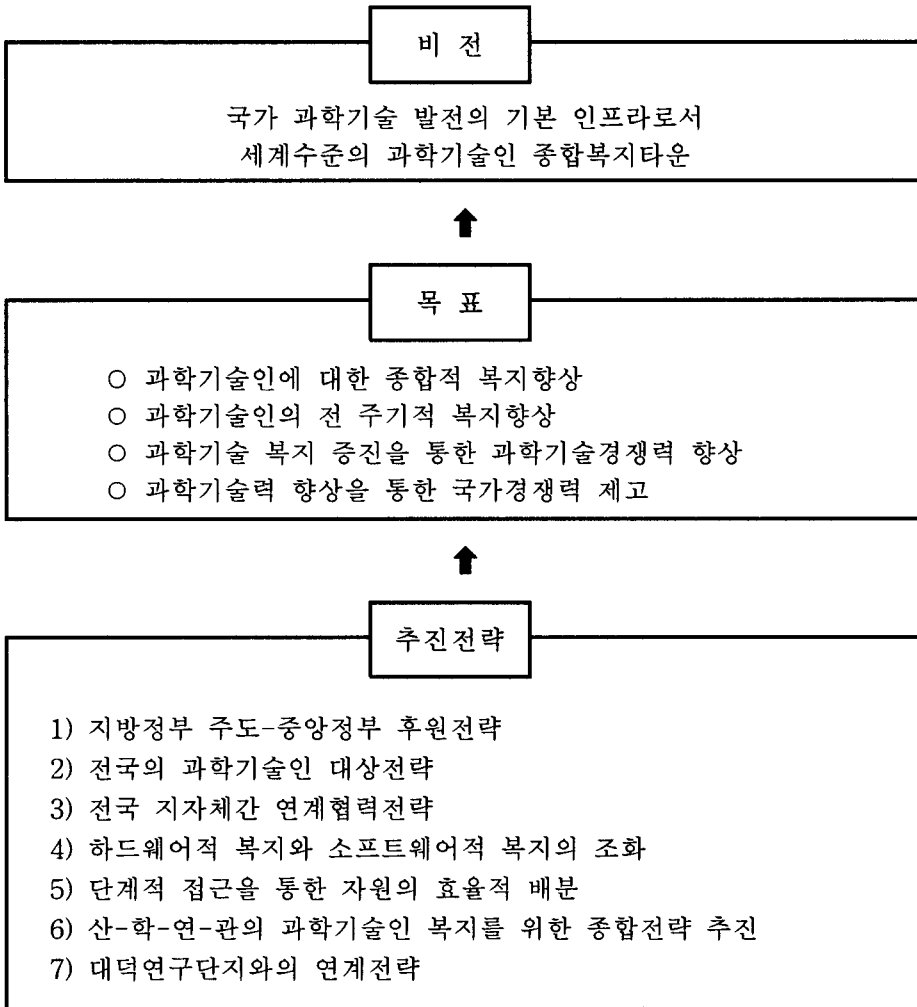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종합복지타운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기본 인프라는 다양한 과학기술인들이 활용하고 그 영향의 정도가 광범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모든 과학기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하여야 하는 명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세계수준의 복지타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과학기술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종합복지타운은 세계수준의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세계최고 수준의 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본 복지타운이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되는 종합복지타운으로서 향후 건설될 다른 종합복지타운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과학기술인종합복지타운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종합복지타운은 과학기술인의 전 주기적인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제고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3.2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추진전략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추진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는 추진전략으로서 7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개념



먼저, '지방정부주도-중앙정부 후원전략'이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장기적이고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후보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업의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 그리고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학기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요구된다.

둘째,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전국의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인 복지의 수혜자는 특정 부류의 과학기술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과학기술인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모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인 상호간 지식의 협력은 물론 그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혁신체제내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메카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16개 지자체들 간의 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이 전국의 모든 과학기술인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넷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하드웨어적인 복지와 소프트웨어적인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복지는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위한 제반 시설, 건물, 인프라, 기자재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기술인 복지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복지는 이들 하드웨어적 시설들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 콘텐츠, 내용물 등을 나타낸다.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물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하드웨어적 시설과 소프트웨어적 내용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복지타운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설 및 운영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건설·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전략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먼저, 단계적 건설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종합복지타운의 건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핵심 시설의 구축을 우선적인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종합복지타운을 완성시킨다면 초기단계에 자원의 동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단계적 건설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사업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본 사업과 같이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초기의 계획이 반드시 합리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획의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수행, 보완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여섯째,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설은 산·학·연의 모든 과학기술인들의 복지를 지향하는 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업은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사업의 종합성은 대상 과학기술인에 있어서도 요구된다. 즉 본 사업은 대학, 공공연구소, 산업계에 있는 모든 계층의 연구 인력의 활용을 목표로 하여 이들 간의 다양한 차원의 질적인 정보의 흐름과 협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산·학·연간 인적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왔다는 점에서 본 종합복지타운이 산·학·연의 이질적인 과학기술인력 간의 협력 및 우의를 다지는 훌륭한 마당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성은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이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대덕연구단지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덕단지는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메카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최근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이곳에 밀집하여 연구, 개발, 생산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에 있어 후보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종합복지타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인근지역과의 조화 및 활용방안까지도 함께 연계하여 적정한 후보지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을 위하여 입지 선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입지선정 시 요구되는 중요사안으로는 첫째, 인근지역과의 조화 및 활용방안. 둘째, 편의성과 접근성. 셋째, 최근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반영. 넷째,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중요정책들과의 적극적인 연계. 다섯째, 기존 과학기술 복지관련 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입지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시한 5가지 측면이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입지선정에 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된 연구와 경험이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초기 연구의 측면에서 볼 때 전술한 5가지의 사안에 대한 고려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추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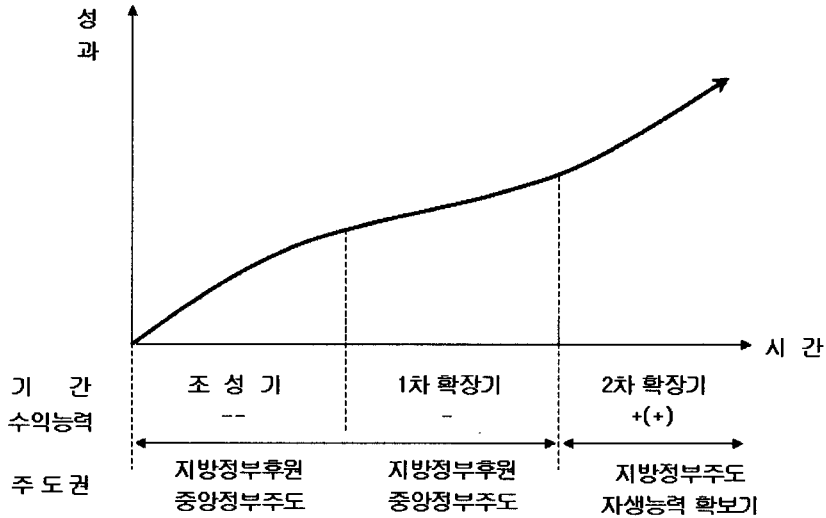
5. 재원소요 방안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설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3개의 부문으로 분류되고 주요 7대 추진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7대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시설의 재원을 충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재원조달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이 같은 접근방법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범국가적인 시설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업 구체적인 수혜자가 전국의 과학기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설립 및 운영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둘째,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본 타운의 재정적 자생능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설립 및 운용의 과정을 1) '조성기', 2) '1차 확장기', 3) '2차 확장기'의 3단계로 나누어 보면(<그림 5> 참조), 적어도 '2차 확장기'에 있어서는 본 종합복지타운이 재무적으로 자생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규모로 추진하며, '2차 확장기'의 수익창출 능력을 감안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성기'와 '1차 확장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지방정부후원으로, '2차 확장기'에는 지방정부와 민간 주도의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5>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운영단계에 따른 자생능력



셋째,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민간부문이라 함은 실제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에게 본 종합복지타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서 이들의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2차 확장기'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수익창출 능력을 극대화하여 민간부문의 미래 수익창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이 과학기술 하드웨어의 구축에서 소프트웨어적 과학기술 정책으로 옮겨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과학기술복지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

술인에 대한 우대가 매우 절실하다는 전제하에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에 관한 기획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시도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정책방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은 과학기술정책에 매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고도의 실험성(experimentality)을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효과는 계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 및 그 가족들에게 보건, 체육,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증가 시켜 이들의 과학기술 연구 활동에 큰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높은 동기유발은 과학기술인들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생산성을 제고시켜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는 결국 과학기술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질 것이며, 이 같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재투자는 물론 과학기술인 복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국가혁신체제의 파트너십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융합화, 복합화 되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전국의 산·학·연 과학기술인들의 매우 효과적인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문화, 교육훈련, 보건의료 분야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종합적인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 및 복지 관련 시설들이 단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립, 운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복지타운은 과학기술인 복지의 핵심 분야들을 종합하여 이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은 초·중·고 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견 과학기술인, 은퇴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주기적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으로서 우리 사회 내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과학기술은 다양한 세대 간의 협력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특히 초중고 학생

들은 최근 이공계 기피를 하고 있는데, 본 종합복지타운에서 훌륭한 선배 과학기술인들과의 다양한 접촉과 훈련을 통하여 과학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나 실행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 건립 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에 이르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인 종합복지타운의 건립은 최근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국가과학기술 발전전략이며, 과학기술인들의 복지향상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매우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부 (2002), 「과학기술연감」, 서울.
- 김은환 (2002), “이공계 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 「CEO Information」, 제341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김선영 등 (2003),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방안」,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김학수 등 (2004),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상(이미지)’ 연구”, 「기술혁신연구」, 제8권, 제1호, pp. 95-123.
- 김근홍 (2005), “독일 노인복지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아젠다 2010을 중심으로”,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9, 2005년 가을호, pp. 41-69.
-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2002), 「과학기술인 추모공원 및 휴양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서울: 과학기술부.
-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200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대식 (1999),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한국행정논집」, 제11권, 제1호, pp. 51-66.
- 심상완 (2002), 「고령화 사회대비 복지 과학기술 정책 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원.

- 이영무 등 (2001), 「청소년의 이공계대학 진학을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이순형 등 (2002), 「세계석학을 활용한 과학기술 문화 확산 정책연구」, 서울: 과학기술부.
- 이수연 (2002), 「과학기술인력의 복지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수연 (2004), 「과학기술인 전 주기적 종합복지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과학기술부.
- 임병우 (2004),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5, 2004년 가을호, pp. 7-28.
- 정선양 (1999a), 「환경정책론」, 서울: 박영사.
- 정선양 (1999b),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선양 (2000), 「지방과학기술정책 성과제고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선양 등 (2001), 「국가지식체제의 Soft Infra 구축」, 서울: 과학기술부.
- 정선양 등 (2005), 「국내외 최신 과학기술 동향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연구(II)」,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정선양 (2006), 「기술과 경영」, 서울: 경문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서울: 과학기술부.
- Abbott, S., Hobby, L. (2002), “Who Uses Welfare Benefits Advice Services in Primary Care?”, *Health and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Vol. 11, No. 2, pp. 168-174.
- Badham, R. (1994), “From Socio-economically to Socially Oriented Innovation Policy”, in: Aichholzer, G. and Schienstock, G. (eds.), *Technology Policy: Towards an Integra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Concerns*. Walter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pp. 1-23.
- Croissant, A. (2004), “Changing Welfare Regim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Crisis, Change and Challeng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38, No. 5, pp. 504-524.

- Chung, S. (1996), *Technologienpolitik für neue Produktionstechnologien in Korea und Deutschland*, Heidelberg: Physica-Verlag.
- Chung, S. (2001), "Knowledge Diffusion in Korean Society", Banerjee, P. and Richter, F. J. (Eds.), *Intangibles i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Euro-Asian Perspectives*, Palgrave, Hampshire and New York, pp. 239-258.
- Ewers, H. J. (1990), "Marktversagen und Politikversagen als Legitimation staatlicher Forschungs- und Technologiepolitik," in Krupp, H. (ed.), *Technikpolitik angesichts der Umweltkatastrophe*, Physica-Verlag, Heidelberg.
- Gielow, G., Krist, H. and Meyer-Krahmer, F. (1985), *Industrielle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 Diskussion theoretischer Ansätze und ihrer empirischen Evidenz*, Karlsruhe: FhG-ISI.
- Gomanee, K., Morrissey, O., Mosley, P., Verschoor, A. (2004), "Aid, Government Expenditure, and Aggregate Welfare", *World Development*, Vol. 33, No. 3, pp. 355-370.
- Khalil, T. (2000), *Management of Technology: The Key to Competitiveness and Wealth Creation*, Boston: McGraw Hill.
- Lai, O. K. (1994), "Farewell to Welfare Statism! More Happiness in Welfare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1, No. 1, pp. 43-54.
- Majer, H. (1992), *Wirtschaftswachstum: Paradigmenwechsel vom quantitativen zum qualitativen Wachstum*, Oldenbourg, München/Wien.
- Schienstock, G. (1994), "Technology Policy in the Process of Change: Changing Paradigms in Research and Technology Policy?", in: Aichholzer, G. and Schienstock, G. (eds.), *Technology Policy: Towards an Integration of Social and Ecological Concerns*. Walter de Gruyter, Berlin and New York, pp. 1-23.
- Stoneman, P. (1987), *The Economic Analysis of Technology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Tidd, J., Bessant, J., Pavitt, K (2005), *Managing Innovation: Integrating technological, market and organizational change*, 3th Ed., Chichester: John Willy & Sons.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Welsh, J. & Schneider, R. (1995), *Technik gestalten - Zukunft gewinnen*, Bund Verlag, Köln.

□ 논문 접수: 2006년 5월 1일/ 최종 수정본 접수: 10월 30일